

중동 위기와 반전 운동 2, 4~5면
 - 레바논의 반정부 운동
 - 이라크 '탈출 전략' ?
 - 열우당과 정부의 '철군' 사가극



베네수엘라 대선과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3면

노동법 개악과 민주노총 파업 8면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2면
 존 몰리뉴 칼럼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7면

23호 2006년 12월 9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맛불

값 600원

비정규직 대폭 확대 파병 재연장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노무현 · 김근태 · 한나라당의 합작품

노무현이 또 “임기를 못 마칠지 모른다”며 평강을 부렸다. 이래서는 이라크 파병 재연장, 레바논 파병, 노동법 개악, 한미 FTA 등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본 노무현은 우익에 굴복해 전효숙 카드도 버리고 ‘가출 협박’을 한 것이다.

지지를 8퍼센트의 ‘살아 있는 시체’가 괴성을 지른 것이다. 위기의 본질은 개혁 배신과 반민중적 정책에 의한 지지 기반 해체다.

한나라당은 “남은 1년을 잘 버텨 달라. 협조하겠다”며 일단 노무현을 달랬다. 괜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어차피 굴러들어올 권력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강재섭은 “상대방의 자살골도 우리의 득점이며, 지지율을 잘 관리해 나가자”고 했다.

그러나 사학법 개악과 정연주 · 이재정 코드 인사 철회 등 우익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언제든지 이런 “횡포에 굴복”할 자세다. 우익의 협조가 있어야 비정규직 개악안 날치기 통과 같은 짓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는 신자유주의 · 친제국주의 정책

의 종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 민중 운동에는 타협 ·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은 현재 노무현과 이진투구(진흙탕 개싸움) 중인 김근태와 열우당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개악안 날치기 때 반대표를 던진 열우당 의원은 임종인 1명뿐이었다. 김근태는 “FTA 찬성론자”를 자처해 왔고, 부동산도 “시장 원리로 풀자”는 시장경제 소신과 다. 어지럽게 눈속임했지만 결국 이라크 파병도 1년 재연장하자자는 게 열우당 당론이다.

‘도로 민주당’이 ‘평화 · 개혁’이라는 김

근태나, 영남 지역주의와의 타협을 ‘반지역주의’라고 우기는 노무현이나 사기꾼이기는 마찬가지다. 어떻게 사기를 치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다투는 광우병과 조류독감의 싸움일 뿐이다.

노무현은 4 · 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처럼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에 의해 “임기를 못 마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러한 투쟁을 건설 · 주도하는 세력이 정국의 주

12.16

이타론 부대 철수

점령 종식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

자이툰 부대 즉각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

일시 : 12월 16일(토) 오후 3시
 장소 : 보신각 앞(서울 종로) / 주최 : 파병반대국민행동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맛불>

<맛불> 온라인 기사

<http://www.counterfire.or.kr>

12 · 3 반전 집회 보고

제이유 로비 사건

한미FTA 저지 운동 탄압 중단하라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정부는 한미FTA 반대 시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 중 이 정권에 관용을 베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5년 동안 부동산 불로소득만 6백조 원이라고 합니다.”

— 심상정 의원

“뉴라이트의 역사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새롭게 인식해 나가는 과정으로 학문의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다.”

— 한나라당 대변인 유기준

“종부세 내지 말자! 국세청장 사퇴하라! 북한은 핵폭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노 정부는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까무라치게 하고 있다. ... [종부세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가렴주구형 세금 폭탄”

—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결성한 라이트 코리아 대표 봉태홍

“17대 국회의원들은 예전에 비하면 다들 성자가 될 것 ... 죽으면 사리가 많이 나올 것 ... 농성도 자주 하고, 성매매 금지법으로 거기[성매매 업소]도 못가지 않냐.”

— 한나라당 의원 이재웅



자이툰 부대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12월 3일 반전 집회

정부와 열우당의 ‘철군’ 사기극

정부에 ‘생색내기’ 식 철군 계획을 요구해 온 열우당이 다시금 ‘사기꾼’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11월 30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이라크 파병연장안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철군 계획안’ 없이 정부의 파병연장안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더니 말이다.

열우당은 수정을 전제로 정부안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애초에 요구했던 철군계획서 제출도 내년 6월까지 유예해 졌을 뿐 아니라 수정안 어디에도 “철군” 또는 “철수”란 단어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방부장관 김장수는 그나마 “열린우리당의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애초의 파병연장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열우당은 수정안에 “[자이툰의] 임무 종결 시한은 2007년 내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철군 여론을 달래려 하지만, 우리가 1년을 더 기다릴 이유는 전혀 없다. 애초 잘못된 ‘임무’ 자체가 문제인데, 그 임무를 ‘종결’하기 위해 1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더구나 그 동안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이 해온 거짓말을 떠올려 보면 ‘2007년 철군’ 약속조차 믿을 수 없다.

2003년 4월에 “비전투병”만 파병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그 해 10월 전투병 파병을 결정했다.

지난해 열우당 국방위 간사 김성곤은 파병연장안 찬성을 독려하면서 “파병 연장 동의안은 사실상 ‘이라크 단계적 철군 동의안’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속임수였을 뿐이다.

파병연장안에 동의한 바로 그 날 열우당은 레바논 파병안도 ‘세트’로 동의해 줬다. 그리고 레바논 파병안은 아예 ‘만류’ 시능조차 하지 않았다.

레바논 파병안의 골자는 특전사 위주로 3백50여 명의 군대를 파병해 “헤즈볼라 무장해제 작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군이 파병될 레바논 남부 지역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 바로 레바논 남부다.

지금도 이 곳엔 이스라엘이 쏜 1백20만 발의 집속탄 가운데 터지지 않은 1백만 발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불발탄 사고로 인한 남부 지역 민간인 사망자만 26명이다.

정부와 열우당의 철군·파병 ‘세트’ 사기극에 속아서는 안 된다.

조명훈

>> 4~5면의 관련 기사를 함께 보시오

부유층 과세와 공공 임대주택이 대안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우익은 “가렴주구형 세금 폭탄”이라며 종부세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조중동이 “세금 폭탄”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워놓은 덕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수류탄이라면 집값 상승은 핵폭탄”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반발하자, 보수 언론들도 “1주택만 보유한 봉급생활자와 고령 은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논리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종부세 해당 주택 88만 3천 가구 가운데 다주택자가 보유한 것이 무려 81만 5천 가구(92퍼센트)에 달한다. 또, 1주택자라도 집값이 1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열우당은 종부세 삭감에 반대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한나라당과 함께 주택·토지 재산세 인상률을 5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춰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 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세금을 깎아주

려다 “부자 비호 정당”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한나라당은 공유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판매하는 홍준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값 아파트’ 정책이라고 사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반만 팔면서 반값이라고” 하는 속임수다. 30평 정도 아파트는 적어도 매월 30만 원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토지임대료가 낮게 유지된다면 10년 후 비싸게 되파는 또 하나의 ‘로또 아파트’가 돼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

건설회사들은 토지를 분양받아 임대료 수

집부자들과 건설업자들에게

더 많이 과세하고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라

익을 얻을 수도 있고, 현재처럼 최초 주택분양에서 여전히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게다가 공공택지나 국유지에서 의무적으로 이 방식을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크다.

‘홍준표 아파트’가 생색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건설업체와 집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시장주의를 명분으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집부자들과 건설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이를 이용해 국가가 나서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때 비로소 집값 상승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익은 지난 몇 년간 오른 집값 수익 원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것조차 “재산을 국유화했던 공산당 수법”이라며 게거품을 물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부자들에 맞선 대중 투쟁을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동훈

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뜰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16퍼센트(10퍼센트 포인트)나 삭감된다.

현재 제도 아래에서도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중상위 소득자(평균소득 1백66만 원)가 고작 48만 원씩 받게 돼 있어 “용돈 연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은 거기에서 8만 원을 깎겠다는 것이다. 15만 원씩 내던 보험료를 이제 21만 원씩 내야 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 개악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기초연금제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제는 당장 도입돼야 한다. 그것도 정부 안처럼 8만 3천 원짜리 경로수당이나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부유층과 기업주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삭감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당이 주장해 왔던 부유세·군비축소를 통한 복지 확대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제도 내적인 고민이 부족했던”(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것이었다는 개량주의적 문제의식의 결과인 듯하다. “채찍(투쟁)만 쓰기보다는 당근(양보)을 쥐서 지배자들의 양보를 유도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후퇴가 반영된 것이 바로 최근 당 지도부 일부와 의견그룹 ‘전진’이 주장하는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 양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론이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하면 저들도 양보할 것이라는 생각은 경제 위기 시기에 ‘비현실적’이다.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한 지 며칠도 안 돼 열우당과 민주당은 뒤통수를 치고 국민연금 개악안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악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삭감’을 맞바꾸자는 열우당 안은 조삼모사일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계책일 뿐이다. 이런 이간질에 동참한다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더 큰 단결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제 문제가 약간 진전되더라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악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악을 반대하면서도 기초연금제 도입을 요구해 노동자들의 이익을 일관되게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을 통해서만 이런 개혁을 쟁취할 수 있다.

장호중

베네수엘라

대선 후의 계급투쟁

12월 3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21세기 사회주의 혁명” 지속을 공언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거주하는 맑스주의자 저술가 **마이클 레보위츠**(Michael Lebowitz)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와 “볼리바르 식 혁명”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축약한 이 글의 전문(全文)은 <맞붙> 웹사이트를 보시오

어떤 점에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이 과정을 추동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혁명은 쿠데타나 특정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분명히 혁명적 과정이 진행중입니다.

이 과정 덕분에 사람들이 아래로부터 권한을 획득할 뿐 아니라 인간 개발이라는 목표도 확고하게 지향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일 머니는 인간의 생산력 발전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산관계를 창출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권력(도시 지역의 2백~4백 가구씩으로 조직된 자치 평의회)이 등장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지는 분석가들이 아니라 오직 현실의 투쟁이 결정할 것입니다.

분명히 차베스는 이 과정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베스는 진공 속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그에게 보내는 놀라운 반응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전율하게 하고 그에게 에너지와 자신감을 주는 이런 반응이 없다면 그는 아마 처음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갖고 있던 ‘제3의 길’ 전망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지도부와 사회 기층민들 사이의 변증법적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층민들은 어떻게 조직되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부문들 — 빈민가에 사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 노동조합 연맹 UNT로 조직된 노동자들, 농업 노동자들과 농민들 — 을 어떻게 단결시킬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에서는, 예컨대 토지 위원회, 보건의로 위원회, 상하수도 위원회, 방어 [위원회], 스포츠 [위원회] 등으로 기층민들이 다양하게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평의회에서는 이런 특정 부문의 관심사들을 집중시켜서 지역사회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 점은 기층을 단결시키는 데서 중요한 진일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개별 지역사회들을 공통의 요구로 연결시키는 데까지, 나아가 그들을 조직 노동자들 — 비공식 부문 대중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 과 직접 연결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UNT가 내부 분파 투쟁에 휘말려 있어서 조직 노동자들이 지도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도구의 발전은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위기 상황에서 또는 2004년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 당시 그랬듯이 차베스가 기층에서 정치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면 더 빨리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끔찍한 빈곤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물론] 보건의로, 교육, 문맹 퇴치 등의 분야에서 야심찬 사회개혁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명적 격변 없이 베네수엘라 사회를 얼마나 많이 개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회개혁 프로그램들이 대중에게 큰 진보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혁명적 단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계속 나아가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치·문화 혁명이 없다면, 혁명은 반드시 변질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문화는 고질적인 정실주의와 부패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차베스 지지 세력의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베스 주위에는 “사회주의 없는 차베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중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 자기 집안의 권력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보다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계급투쟁은 베네수엘라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진정한 주권을 추구하는 투

쟁, 옛 소수 특권층과 볼리바르 식 혁명 사이의 투쟁, 자본가들과 조직 노동자들·농민들 사이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볼리바르 식 소수 특권층이 되려는 자들과 착취당하고 배제당하는 대중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베스 진영 내부의 모순이 혁명의 진전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 점은 다른 전선들에서 전진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도 많은 우연적 요인들에 달려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변혁에서 국가는 어느 정도나 장애 요인입니까? 파리 코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맑스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기존 국가 기구”를 인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분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변모”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노동자들은 파리 코뮌 때 그랬듯이 아래로부터 자신들의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해야 할까요?

베네수엘라의 기존 국가는 지금까지 엄청난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회개혁 프로그램들을 확립하는 데서도 장애물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사회개혁 프로그램들은 모두 기존 국가 기구들을 우회하는 “미션”들을 창설한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국가가 자치 평의회 의 형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권력 — 맑스가 파리 코뮌에서 본 것과 비슷한 새로운 종류의 국가 — 의 토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 고립 문제는 어떻습니까?

고립을 저지할 책임은 베네수엘라 외부의 좌파에게 있습니다. 저는 현실 세계의

또 다른 사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비난하는 좌파 교조주의자들을 참을 수 없습니다.

혁명가들의 책임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에서 배우고, 석유 판매 소득을 이용한 새로운 생산관계 창출, 사람들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의 정도와 범위, 자치 평의회 건설, 작업장 점거와 노동자들의 의사 결정 등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국내에서도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새로운 상식을 확립하는 조직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무엇이 변했으며, 이번 대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치 평의회가 발전하고 있으나 조직 노동계급이 조직상의 분열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년에 발생할 것입니다. 차베스는 사회주의 과정을 심화시키고 사람들을 단결시켜 단일한 혁명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 과정을 지속하는 데서 아주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차베스의 선거운동보다 더 앞뒤안 맞는 선거운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베스 진영 내부의 강렬한 모순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베스 세력 내부에 권력을 기층으로 이전하는 투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회주의 과정의 심화에 대해 결코 낙관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베네수엘라가 계급투쟁의 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전 운동의 전진을 위해

최근 뚜렷이 강화되고 있는 반전 정서는 실제로 한국 지배자들의 걱정거리다. (KBS 9시 뉴스)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무려 90퍼센트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지지했고, (MBC 뉴스데스크) 여론 조사에서도 76퍼센트가 파병 연장에 반대했다.

이런 압도적 파병 반대 정서 때문에 열우당 이미경 의원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가다 유권자들에게서 외면당할 것”(《중앙일보》 12월 1일치)이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미국 내에서 1년 앞

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에서 반미 감정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경고성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우려할 지경이다.

열우당이 “2007년 자이툰 임무 종결”이라는 ‘면피용’ 카드를 내놓은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이에 대해서는 ‘다함께’ 성명서 “2007년 자이툰 철군? — 생색내기에서도 후퇴한 열우당의 눈속임”과 2면의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오.) “2007년 자이툰 임무 종결”이라는 눈속임 카드를 꺼내 반전 여론을 현혹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파병을 연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반전 여론 확산은 부시와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촉발했다. 전쟁광들의 선거 패배는 반전 활동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제공했다.

그러나 부시의 중간 선거 패배 이전에는 이라크인들과 국제 반전 운동의 끈질긴 저항이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3년 이라크 침략 이후 국제 반전 운동은 미국·영국·한국 등 주요 파병국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 하락과 반전 여론 확산을 이끌어냈고, 몇몇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철군을 정취하기도 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2004년 3월 스페인 반전 운동이 우파 총리 아스나르를 쫓아내고 스페인 군대를 철군시킨 것이다.

물론 부시 일당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

레바논 정치 위기

지난 1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무려 1백만 명(레바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참가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현 시니오라 정부의 퇴진을 요구해 온 야당 진영 — 헤즈볼라가 주도하고 있다 — 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시위는 베이루트는 물론 레바논 전역을 마비시켰다. 레바논 전역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들었고, 이 때문에 베이루트로 향하는 모든 도로가 차량으로 메워졌다.

시위 전날 시니오라는 TV 연설에서 “레바논의 독립과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에 처해 있다”며 시위를 비난했다. 그러나 베이루트를 가득 메운 시위 참가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이 정부는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 동안 우리를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고 한 시위 참가자는 말했다.

또 다른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시니오라 정부]은 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개입하도록 놔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간섭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독립된 레바논을 원합니다.”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슈카이트는 “현 정부는 미국의 하수아비자 꼭두각시[이고] … 조지 부시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고 말했다. “레바논 국민이 죽어 나가고 있을 때 이 자들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점심 식사나 하고 있었습니다.”

시위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위는 단지 시작일 뿐”(헤즈볼라 소속 의원 알리 무크타다)이다. 시니오라가 여전히 퇴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위 다음 날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무기한 파업과 농성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베이루트 도심에 남아 총리 공관과 정부

청사들로 향하는 주요 도로들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워싱턴포스트〉는 점거 농성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축제 분위기에서 … 일부는 굳은 표정의 병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누군가 지척에 있는 정부 청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주세요.’”

상당수 농병가들이 지적하듯, “헤즈볼라가 이끄는 반정부 운동의 도전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일격이기도 하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앤드루 예섬은 이렇게 말한다. “워싱턴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 레바논 상황이 대체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데다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오라와 우파들은 일단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물리적 맞대응을 피하고 있다. 의회 내 반시리아·반헤즈볼라 진

영의 지도자인 사드 하리리 — 지난해 암살된 전 총리 라피크 하리리의 아들 — 는 지지자들에게 대항 시위를 자제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쟁이 계속되고 양극화가 더 첨예해지면 우파와 미국 등 서방 강대국 정부들은 어떻게든 반격에 나서려 할 수 있다. 특히, 부시 일당은 레바논 위기의 책임을 이란과 시리아에 떠넘기며 ‘악의 축’에 대한 공세를 정당화하려 한다.

레바논의 반정부 운동은 이스라엘을 패퇴시킨 레바논의 저항 운동이 부패한 친서방 엘리트와 종파 정치 체제라는 식민 통치 유산을 타파하기 위한 투쟁으로 새로운 한 발을 내딛고 있음을 뜻한다.

이 운동이 성공한다면, 이는 지난해 이스라엘군의 패배에 이어 국제 반제국주의 운동이 거둔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 — 그리고 미국의 패배 — 가 될 것이다.

김용민

부시는 이라크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

“이라크 해결책에 관한 다양한 계획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민투표로 여겨졌던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거둔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조기 철수라는 생각은 가능한 대안에서 급속히 제외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치 〈뉴욕타임스〉는 오는 6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 스터디 그룹(ISG)’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ISG는 민주·공화 양당의 고참 정치인과 전·현직 관료들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로, 지난 몇 달 동안 이라크 수령에 빠진 미군을 구해낼 ‘모책’을 찾으려 애써 왔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ISG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 15만 명 중 15개 전투여단(최대 7만 5천 명 규모)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권고’(강제력이 없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령 종식과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방안은 완전한 사기극이다. 첫째, ‘단계적 철군’이라지만 구체적 철군 시한이나 일정표가 없다.

둘째, 사실 ‘철군’이라는 말 자체가 사기다. 미국 어법상 ‘철수’나 ‘철군’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해외 주둔군의 본토 복귀를 뜻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전투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포함되고, 따라서 실제로 7만 5천 명이 이동하더라도 그것은 ‘본토 복귀’가 아닌 ‘이라크 또는 중동 내 재배치’일 수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군이 이라크에 있고 있는 4개의 초대형 기지는 이를 방증한다.

재배치

셋째, ‘철군’(또는 ‘재배치’)은 결코 평화적 과정이 아니다. 베트남전의 경험을 볼 때, 지상군 감축은 공군력에 대한 의존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이것은 더 많은 폭격을 뜻할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일시적 병력 증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즉, ‘재배치’의 핵심 전제 조건인 바그다드에 대한 통제력 회복 등을 위해 ‘일시적’ 병력 증강을 허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시 정부는 바그다드에 추가 병력을 보낼 계획인데, 상당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로는, ISG 인사들은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재배치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병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 ‘용두사미’ 보고서에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그것이 부시 일당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노련한 ‘현실주의자들’답게 “ISG 위원들은 민주적 이라크를 위한 시나리오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 그와 동시에 내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라크 군·경의 독자적 치안 유지 능력 확보는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는 게 분석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이라크 군·경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점점 더 미군과 사이가 틀어지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

사실, 부시 처지에서 지금 상황은 이라크 ‘정부군’이 아니라 ‘정부’ 자체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지난 11월 30일 이라크 총리 말리키가 부시와의 회담을 강행하자 강경파 반미 성직자인 알 사드르는 앞서 공언했던 대로 정부와 의회에서 자신의 지지자들 — 장판 5명과 의원 30명 — 을 모두 철수시켰다.

나아가, 알 사드르 측 의원들은 미군 철수 일정보표를 요구하기 위해 모든 종족과 종파를 아우르는 “반미·반점령 동맹”의 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동맹은 말리키 정부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한편 미군의 점령 명분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ISG가 내용을 보고서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이란·시리아와의 대화’는 미국 혼자서는 이러한 정치·군사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최근 레바논 정치 위기에 대한 부시 일당의 반응을 볼 때, 적어도 당분간 그들은 ‘악의 축과의 타협’을 뜻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여라도 절술적 유연성을 발휘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라크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이라크 정치 세력에 대한 이들 ‘외부 세력’의 영향력은 상당히 과장돼 있고, 특히 사드르 운동과 수니파 저항 세력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당사자들 사이에 실패를 인정하는 ‘고백’이 유행하고 있지만 — 최근에는 럽스펠드와 라이스가 가세했다 — 미군 철수라는 진정한 해결책은 여전히 그들의 선택이 아니다.

김용민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량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권력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공안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전 부의장 강순정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운동단체 활동과 여론 동향을 전화로 범민련 캐나다 본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우익은 강 씨가 지난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 등을 “주도”한 “거물”이라며 경찰을 거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나라에 간첩 안 박힌 곳 있[나]”며 “이제야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계속됐는지 궁금증이 풀린다”고 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선 운동의 배후에는 ‘간첩’과 ‘북한의 지령’이 있다는 식이다. 범민련과 그 소속 통일운동가들의 ‘회합·통신’ 행위는 새로울 것도 없다. 범민련의 설립 목적 자체가 북한과 일상적으로 통신하고 교류하는 것이다. 통일 운동을 위해 남한의 통일운동가가 북한 및 해외 범민련 간부들과 운동의 현황과 정세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귀도 안 들리는

남한 정부는 때때로 범민련의 정부 주도 통일 행사 참여를 사실상 허용하면서도 필요할 때면 마치 꾀감 빼 먹듯 이들을 손쉬운 ‘공안 탄압’의 먹잇감으로 삼아 왔다. 게다가 강 씨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선 활동에서 물러나 칩거 중인 칠순 노인이다. 한 범민련 인사의 말처럼 경찰은 “귀도 안 들리는 노인네를 간첩으로 몰아 공안정국을 만들려

고 한다.” 또, 최근 검찰은 비전향 장기수 김영승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가 인터넷에 “한국전쟁을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으로, 국군을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친북·이적 표현물을 게시”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견의 자유이고, 사법 대상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다. 게다가 김 씨는 빨치산 활동과 자신의 신념을 옹호한 대가로 이미 너무나도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 그는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으며 청춘 대부분(35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가 “국군을 적으로 묘사”했다는 것도 침소봉대다. 그는 지난해 지리산 기행에서 과거의 빨치산 생활을 설명하며 “적들이 없을 때는 천막을 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동굴에서 생활하곤 했다”고 회상했을 뿐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 내 우익 세력의 핵심인 공안 검찰은 “여러 건의 공안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중”이다. 강정순·김영승 씨의 사례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우익들의 야욕을 보여 준다. 노무현은 이런 우익에 타협하고 있고, 이는 우익의 자신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야만적 마녀사냥에 맞설 필요가 있다. 직접 탄압에서 비껴있더라도 모든 진보진영이 함께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한규한

Forums

동부
한미동맹은 균열되는가?
오늘날의 세계 패권 질서와 한국의 대응
12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연사: 김하영(《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장소: 동부여성플라자(건대역 5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330-4624

남부
미국 중간선거 이후
: 위기의 네오콘과 중동
12월 14일(목) 오후 8시
장소: 방배1동 주민자치센터 3층 대강당
문의: 010-6495-9925

<맞불>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 02) 2271-2395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조흥은행 334-04-789648
하나은행 197-910005-87207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 표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존 몰리뉴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⑫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 칼럼의 주제는 주로 자본주의에 대해 맑스주의가 어떻게 주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맑스주의가 자본주의에 반대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도 옹호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제 맑스주의자들이 지향하고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말할 때가 된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맑스가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 글로 쓴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비록 그가 말한 내용이 심오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정부가 어떻게 조직돼야 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형태의 교통수단이 채택돼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지침은 없다.

맑스의 사회주의는 사람들이 꿈꿔 온 이상(理想) 사회의 청사진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등장할 사회 형태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정확한 특징들을 미리 예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첫째, 그런 특징들은 노동계급이 승리하는 구체적 상황에 달려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사전에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그런 문제들은 미래의 노동자들 자신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래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과정에서 심대하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노동자들 — 그리고 우리 모두 — 과 사뭇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맑스가 이해한 사회주의의 근본적 특징이 이른바 '소련 진영'과 중국, 북한 등의 가짜 사회주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맑스가 전망한 사회주의는 노동 대중이 스스로 사회를 운영하는 사회였다. 맑스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이행)기를 일컬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말한 것은 개인이나 정당이나 소수 특권층이 프롤레타리아 위에 군림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독재가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가 사회를 운영하는 것, 즉 진정한 집단적 노동자 권력이었다.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동계급은 자신의 국가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맑스는 1871년 파리 코뮌의 경험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새로운 국가 기구의 형태가 어떤 모습일지 맑스보다 더 잘 아는 이유는 우리가 맑스

보다 더 폭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러시아 혁명의 초기 경험이나 독일 혁명(1918~23년), 그리고 이탈리아(1919~20년), 스페인(1936~37년), 헝가리(1956년), 칠레(1972년) 등등 혁명에 근접했던 상황들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권력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노동계급의 투쟁, 특히 작업장에 바탕을 둔 뿐 아니라(상황에 따라서는) 군대·지역사회 등도 반영하는 대의 기구인 평의회(러시아 혁명 때 '소비에트'라고 부른)의 네트워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 평의회들이 새로운 국가의 핵심이 되고, 정부·군대·내각 등은 이 평의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계급이 실제로 사회를 운영하려면 이 새로운 기구가 정말로 노동계급의 집단적 이익과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이 말은 이 기구가 매우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파리 코뮌과 러시아 소비에트 등의 경험을 통해 이런 원칙을 일부 알고 있다. 평의회 대의원들은 그들을

파리 코뮌 — 사회주의 사회의 맹아를 보여 주다

선출한 기구들(주로 작업장 집회들)에 의해 즉시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들의 보수는 숙련 노동자 임금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 그런 원칙들이다.

또, 노동자들의 정치 권력이 스스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경제 권력이라는 확고한 토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정치 권력은 모두 궁극적으로 경제 권력에 의존한다.) 이를 위해 노동계급은 자신의 국가를 이용해 주요 생산·분배·교환 수단의 집단적 소유 체제를 확립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위원회들을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이런 생산·교환·분배 수단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런 관점의 사회주의에서는 국가 소유의 필요성이 노동자 권력이라는 기본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자 권력과 노동자 통제가 없는 국가 소유 자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일 뿐이다. 또, 우리가 맑스주의 이론과 러시아의 경험에서 알게 된 것은, 비록 노동자 권력이 처음에는 한 나라에서 건설되더라도 그 노동자 권력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국제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확산 과정에서 분명히 위대한 투쟁이 벌어지겠지만, 우리가 노동 대중 스스로 운영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 생각하는 사치를 부려 본다면, 다음의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생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주적으로 계획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자본주의가 발전시킨 엄청난 생산력이 사람들의 필요에 이바지하게 된다면, 세계 대다수 사람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혀 온 빈곤·영양실조·결핍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주택, 네채, 자동차 다섯 대, 개인용 제트 비행기 두 대를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괜찮은 생활을 누리는 데 꼭 필요한 필수품을 누구나 갖게 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어지간한 생활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는 교육과 여가, 특히 보람있는 노동을 제공해 지금껏 평범하기만 했던 사람들의 지적 생활과 인간적 개성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사회의 더한층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 사회주의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벌어진 전쟁의 근본 원인 — 토지·자원·이윤을 차지하기 위한 영주들·왕가들·기업들·국가들 간의 투쟁 — 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런 사회는 낡은 계급 체제의 유산들이 사라지면 정말로 계급 없는 사회 — 수렵·채집 사회와 비슷하지만 현대적 기술을 보유한 국제적으로 계급 없는 사회 — 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합한 생산자들이 생산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계급의 토대 — 한 집단에 의한 다른 집단의 착취 — 가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에는 사회 위에 군림하며 강제력을 행사하는 특별한 기구인 국가의 점진적 사멸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진정한 인간적 자유가 실현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미래의 사람들이 땅에 붙은 집에 살지 아니면 하늘 높이 치솟은 집에 살지, 버스나 자전거로 여행할지 아니면 미지의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복숭아와 크럼을 먹을지 아니면 딸기와 요구르트를 먹을지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가 쟁취할 만한 가치 있는 목표라는 점만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 준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이다.



창간을 축하하며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기획위원

주간 〈맛불〉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주간 〈맛불〉이 한국 반전 운동, 나아가서 국제 반전 운동의 그야말로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맛불〉의 활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비정규직 개악안 통과에 이어 노동법 개악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전지윤

〈조선일보〉는 비정규직 개악안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규제의 법제화”라고 했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이제 비정규직은 억울한 차별에서 벗어나고, 고용 불안을 떨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것은 황우석도 울고 갈 대사가극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개악안은 기업주들이 기간제와 파견제로 비정규직을 멋대로 고용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준 ‘비정규직 확대·양산 법안’이다.

‘기간제 2년 근무시 정규직화’라는 조항은 2년 주기 대량 해고를 낳을 것이다. 현재도 기간제 평균 근속연수는 1년 8개월이다. 이미 11개월짜리 근로계약이 유행하고 있다. 3개월마다 재계약해서 9개월째 해고하는 ‘3·6·9 비정규직’도 있다. 경총이 기업주들에게 설문조사했을 때도 90퍼센트가 ‘기간이 경과하면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악안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파견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본에서도 이런 조치의 도입으로 10년 만에 파견제 노동자가 5배 늘었다.

그나마 불법 파견시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돼 있던 ‘고용 의제’도 없었다. 이제 1만 명을 불법 파견했던 현대차 정몽구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차별 시정 조치’도 껌데기일 뿐이다. 이 법으로 차별 시정을 받아내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3~5년 동안 거액을 써서 민사소송까지 가면 차별을 인정받을지도 모르지만, 그 때는 이미 해고된 뒤일 것이다.

반동을 저지하라

비정규직 개악안은 벌써 2년 전에 제출된 것이다.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찬반토론도 없이 20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서 보듯 정부와 양당의 개악 의지는 처음부터 확고했다.

저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기업주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멋대로 착취·해고할 자유를 줘야 한다는 데 한치의 썩김도 없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현장 노동자들의 반감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저들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노사정위로 끌어들여 발목을 잡아두었다. 그리고

2년 간 개악안 처리 시도와 유보를 거듭하며 기회를 노려 온 것이다.

그 2년 동안 개악안은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더러운 정국 주도권 다툼에 써먹는 카드였을 뿐이다. 8백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법안을 뒤통자 카드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울며 겨자먹기’ 식 협조를 강요하는 미끼로 실컷 써먹었던 것이다.

노사정위 협상에 미련을 두다가 뒤늦게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지도부도, 그리고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국회에서 재논의를 기대했던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뒤통수만 맞은 것이다.

사용자들은 이제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

렵게’라는 노사관계로드맵까지 처리하게 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노동자 죽이기’를 일단락지으려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더는 생색내기 파업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무기한 전면 파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도 주요 물류 거점 봉쇄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개악안을 철회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진정한 대중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김영삼을 고개 숙이게 했던 1996~97년 대중파업 때처럼 주요 연맹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생산을 멈추고 거리로 나서야 한다.

12월 2일 비정규직 개악안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노동자들

이렇게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승리하기를!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요율제·주선료 상한제 실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 마비가 시작되고 있다. 우익 언론들은 “미친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화물연대(〈조선일보〉)를 ‘법에 따라 엄단하라’(〈동아일보〉)며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미친 것’들은 화물 노동자를 농락하고 멸시해 온 자본가들과 노무현 정부와 우익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적자만 쌓이는 삶에 시달려 왔다. 운송료 수입은 오르는 유가와 물가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은 일감을 얻으려 평균 3.6단계에 이르는 중간 알선을 거치며 운송료의 절반 가까이를 주선료로 떼

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못이겨 급기야 지난해 9월 김동운 씨가 분신 자살하기도 했다. 그 때 정부는 표준요율제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노동부가 발표한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에서도 화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운송료, 다단계 알선 문제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화물연대가 투쟁으로 어렵사리 성사시킨 운송업체들과의 몇 차례 운임 교섭을 훼방놓기까지 했다.

이처럼 거듭 농락을 당해 온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래서 정당하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지는 대단히 높다

. 조합원 1만 2천여 명이 현재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상당수 비조합원들이 동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파업 효과도 커지고 있다. 물류가 집중되는 연말이라서 파장은 더 크다. 정부와 경찰은 파업 불참 노동자들과 일부 조합원들의 물리적 마찰을 침소봉대해 이간질하는 한편, 강제 진압 협박을 해내고 있다.

이를 거부하고 파업 파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물류 거점 봉쇄와 도로 점거에 나설 필요가 있다. 화물연대는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5월 전국의 항운 기능과 물류망을 완전히 마비시킨 파업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따내며 정부를 굴복시킨 바 있다.

민주노총 파업의 초점으로 떠오른 이 파업을 민주노총 지도부는 적극 엄호해야 한다. 특히, 철도노조 지도부는 대체수송을 거부하고 동조 투쟁에 나서야 한다.